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시스

사사건건 삐걱되던 감독당국, 결국 '충돌'

"예산 깎아라" vs "委 해체하라"

〈금융위원회〉

금융위 | 금감원

윤석헌 금감원장 /연합뉴스

1~3급 직원비중 30% 이하 돼야
성과급·인건비 축소 '예산 삭감'

내년도 예산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갈등은 금감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금융위가 3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까지 들고나오면서 분위기는 악화일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지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을 겪으면서 쌓여온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냈지만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성과급이나 인건비, 각종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지난 3일 '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금융위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그동안 쌓여 곪아 터져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 이슈마다 금융위와 부딪혔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금융위는 "금감원 차원에서 기관 징계 수준의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과의 입장과 거리를 뒀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당 주식 매도 행위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징계 수위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금융위는 "형사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는 금감원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공동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금융위가 이를 인가한 만큼 해명할 이유가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금감원은 2015년에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이 흐려질 수 있다며 증선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증선위는 금감원의 내용만으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를 종결했다.

금감원과의 갈등 논란에도 금융위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지적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금감원의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을 정도로 평점이 좋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는 금감원의 방만경영, 부당채용 등을 지적한 바 있어 절차를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상위직급 및 직위수가 과도하게 많고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255명) 운영,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경영 때문에 금감원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 수입예산은 2016년 3256억원에서 2017년 3066억원으로 410억원(12.6%)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의 1~3급 상위 직급이 전체의 45%에 달할 만큼 많고, 보직이 없거나 유사 직위를 만드는 등 상위직 직원에게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직원 직급을 1~6등급으로 구분해 3급 이상에 선임국장·국장·실장·팀장 등 직위를 부여한다. 직급과 직위가 높아지면 월급을 더 받는 구조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3급 이상 비율을 KDB산업은행 등 다른 10개 금융 공공기관 평균(30.4%) 수준으로 대폭 줄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갈등의 근본 원인이 금융위에 집중된 정책, 감독 체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예산심사 무기' 금감원 길들인다
대통령 해체 공약, 속히 이행해야

금융위는 1998년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이다. 2008년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을 가져오면서 탄생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 명칭에서 '감독'을 떼고 금감원을 독립된 집행기구로 분리했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총괄하고, 감독·검사 업무의 집행기관인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휘·감독을 받아 왔다.

이런 이유를 들어 금감원 노조도 "대통령이 금융위가 독점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금융위가 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회계법인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책임감 있는 회계가치 평가로 신뢰 줘야"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 간담회

'삼성바이오' 논란 의식한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대형·중견·중소 회계법인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회계법인의 업무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근간으로 하며, 금융자산이나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는 자본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의 회계법인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장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이용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평가 등으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삼성바이오에 대한 가치평가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당시 합병에 앞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제일모직이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두 회계법인은 각각 8조9360억원과 8조5640억원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8월 5일 삼성의 내부문서를 보면 자체평가액 3조원과 시장평가액 평균 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 즉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주가하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시간에 담배 42갑 팔아야 알바일당 나와

〉〉1면 '르포, 최저임금…'서 계속

주유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없어진 자리는 셀프주유기가 차지하고 있다. 주유소 사장님들은 한 대에 1000만원을 육박하는 셀프주유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금이 계속 올라가기만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은 알바를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 차라리 셀프주유기가 낫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등촌동 H주유소 사장님은 "내년엔 셀프주유소로 바꿀까 한다"면서 "외곽에 있다 보니 손님도 많지 않아 주말 장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업종은 모두 다르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울하지 않은 곳은 찾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편의점 업계에선 담배만 잘 팔리는 곳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속설이 새로 생겼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432원이 마진이다. 여기서 카드수수료, 가맹본사 수수료 등을 빼면 실제 가게 주인에게는 200원 정도가 돌아간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1시간에 42갑의 담배를 팔아야 그나마 알바생 일당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담배만 잘 팔린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이다.

/김승호 기자, 배한님·석대성·홍민영 수습기자